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2024년도 병무청 국정감사, '24. 10. 11.)



병무청

위원별 목차

(가나다순)

1. 강대식 의원	1
2. 강선영 의원	25
3. 김민석 의원	53
4. 김병주 의원	63
5. 박범계 의원	115
6. 안규백 의원	123
7. 허영 의원	129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목 차

1. 성착취물 제작, 환각파티.. 폭증한 사회복지요원 마약·성범죄 ...	5
2. 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정에만 몰두.. 예우시설 관리는 엉망 ...	10
3. 공익 기다리다 '군면제'.. 1만명 훌쩍	15
4. 병무청, 국방부 방침 미준수로 여군예비군 동원지정 누락 제도개선 필요	21
5. 연예인·고소득자 등의 공익면제 50% 이상 급증	24

<강대식 의원>

1-1. 병무청장은 최근 5년간 사회복지요원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사회복무국>

- 네, 알고 있습니다.
- 성범죄, 마약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2. 사회복지무요원의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회복무국>

- 우리 사회의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대부분 20대인 사회복지무요원도 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강대식 의원>

1-3. 사회복지요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후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하고, 호텔 파티룸에서 환각파티를 벌이는 등 복무시간 외에 일어난 범죄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사회복무국>

- 사회복지요원이 복무시간 이후에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대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사회복지요원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이력자에 대해 복무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4. 사회복지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의 1인당
관리기관과 사회복지요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무국>

- 복무지도관 1인당 445명의 사회복지요원과
111개의 복무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5.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관리 인원은 300명 정도인데, 현재 복무지도관 1인당 복무관리 기관은 111개, 사회복무요원은 445명인 실정임.

복무지도관 인력증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범죄 행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계획은?

<사회복무국>

- 복무지도관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범죄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범죄 발생 이력자에 대한 교육 및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2-1. 선정된 병역명문가들에게 어떤 예우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 병역명문가 표창장, 패 · 증서 수여,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2-2.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해 시행중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관리가 부실한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 예우 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2-3.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양 예우로 시상식, 증서·패 수여식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역명문가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 병역명문가를 포함하여 성실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병역이행자의 날’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2-4. 병역명문가들의 예우증진과 명예심·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명문가의 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 성실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

「병역명문가의 날」 지정추진 검토

‘병역명문가의 날’* 지정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 경과

- ‘병역명문가의 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23. 11월, 이현승의원)

제82조의5(병역명문가의 날) ①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병역이행자의 날’로 명칭 등 수정 의견 제출('23. 12월)

*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 추진 계획

- (방 향)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
- (명 칭) 기념일 명칭은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숭고함을 기리고 성실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병역이행자의 날’로 검토
- (방 법) 관계부처 협의 및 수정안 재입법 추진 등

<강대식 의원>

3-1. 청장님께서서는 사회복지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자원들이 장기대기로 인해 예비군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국>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끝>

* 세부자료 별첨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대책

□ 그간 추진 사항

○ 범정부 협의체 구성 수요 확대 추진

- 사회복무요원 복무가능 기관 및 배치인원 확대

*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5천명씩 1.5만명 추가 배치

- 민생·사회서비스 분야 추가 배치 기관 지속 발굴

* 코로나19 방역지원 584명('22년), 특수학교·지역아동센터 등 591명('24년)

○ 4급 보충역 판정자 현역복무 선택제도 도입('21년)

* ('21년) 1,199명, ('22년) 2,358명, ('23년) 2,604명, ('24.8월) 1,496명

○ 보충역 현역복무 선택 시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 도입('23년)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23.8월), 588명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 소집적체 해소 대책

① 병역판정검사 시 보충역 판정인원 감축

○ 보충역 판정율 전년 대비 3.5%p 감소, 연말까지 약 1만명 감소 예상

< 최근 5년간 보충역 현황 >

('24.8.31.기준, 명/%)

구 분	'24.8월	'23년	'22년	'21년	'20년
전 체	170,603	238,604	248,361	254,361	282,167
보충역	12,457	25,866	26,902	28,781	37,452
%	7.3	10.8	10.8	11.3	13.3

○ 현역복무가 가능한 경우, 현역 자원으로 최대 확보

* 현역판정기준 조정 : 신장체중 16미만/35이상→15미만/40이상, 평편족 16도 이상

→30도 이상, 굴절이상 5.00D 이상→6.00D 이상

②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축소 및 폐지 추진

○ 심사부대 방문 협조 등 보충역 처분 지속 감축

* 현부자 보충역 인원 : ('21) 3,109명 → ('22) 2,515명 → ('23) 2,294명 → ('24.8월) 1,132명

○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전시근로역으로 일원화

- 병역법 시행령상 현역병복무부적합 기준은 사회복무요원부적합 기준과 동일하나 처분결과가 상이하여 법령 간 모순 개선

* 현역병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사회복무요원 → 전시근로역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 개정안 국방부 제출('23.12.29.)

현 행	개 선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에 대한 심사를 거쳐 <u>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u>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에 대한 심사를 거쳐 <u>전시근로역 처분</u>

*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 의견 : 각 군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검토 후 개정추진

③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 지원 추진

○ (배경) 인건비 상승 및 복무관리 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한계

- 특히 '22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인건비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봉급 인상과 맞물려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주체 >

복무기관 지출항목	국가 기관	지자체 행정	지자체 사회서비스		복지 시설	공공단체	
			복지부 이외	복지부 소관		사회 서비스	행정
보수, 교통/피복비 중식비	국고	지자체	국고	지방이양기금		공공 단체	
			지 자 체				

* 지방이양사업은 행안부에서 '26년까지 운영하며, 국고 환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추진한다는 입장

○ (추진계획) 사회서비스 분야 인건비 국고부담 추진

- 사회서비스 전 분야 인건비 국고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적극 협의

* 보건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 지방이양사업 국가 환원 및 대체사업 발굴 등

<강대식 의원>

3-2. 장기대기자의 보충역 처분 사유별(신체등급, 정신질환, 수형자, 전과자 등) 현황 및 이들의 소집적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국>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1~4순위	소집 5순위자				
			계	%	정신과	수형	현역복무부적합
'24년	11,853	417	11,436	96.5	8,104	1,707	1,625
'23년	10,556	381	10,175	96.4	7,980	1,350	845
'22년	10,740	1,724	9,016	83.9	7,273	1,154	589

- 장기대기 처분인원의 다수가 정신과질환 4급 판정자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을 통해 현역 복무 가능한 경우는 현역자원으로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 또한,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편입인원 감소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3-3. 병역면제의 세부기준과 수형자가 장기대기현황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사유에 대해 보고바랍니다.

<사회복무국>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보충역 편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 공제기간 여부, 처분 제외대상 확인 및 거주지 확인 실태조사 등을 거쳐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일부로 전시근로역 처분하고 있습니다.
- 수형자는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설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의 개연성, 범죄 발생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소집 5순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 '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형자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복지시설 등 배치를 제한할 것을 지적

<강대식 의원>

3-4.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충역으로 처분받는 인원 에 대한 분석 현황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질환으로 보충역 처분한 자(정신질환 검사 방법, 절차 포함)

<병역자원국>

-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정신건강의학과 4급 판정 현황
(’24. 8. 31. 기준, 명)

구 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정신건강의학과	3,756	4,762	4,939	4,991	4,265

- 정신건강 관련 검사는 1차 심리검사,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대상자 전원 인성검사(271 문항)와 인지능력검사(89 문항)
 - (2단계) 임상심리사가 개별면담 및 도구 활용 검사
 - * 2차 검사대상 : 1차 검사 이상자, 질병상태문진표(정신과, 심리검사 항목) 체크자
 - (3단계) 정신적 상태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여 검사가 의뢰된 대상에 대해 임상심리사가 면담 및 도구 활용 검사
 - (4단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심리검사결과, 치료기록 등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끝>

<강대식 의원>

4-1. 총무집행계획의 내용대로라면 2019년부터는 여군예비역도 모두 동원지정대상자로 분류했어야 하는데, 병무청이 잘못 분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

<입영동원국>

- 올해 7월부터 국방부 및 군과 여군예비역 전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으며,
- 25년부터 동원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4-2. 향후에는 총무집행계획 방침을 준수하여 여군예비역도
동원지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으로 소집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는지?

<입영동원국>

○ 네, 동의합니다. <끝>

<강대식 의원>

4-3. 예비전력자원 감소현상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전시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해서라도 여군예비군의 동원지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는지?

<입영동원국>

- 네, 동의합니다.
- 국방부 및 군과 협조하여 '25년부터는 여군예비역 전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위원>

5-1. 전체 장기대기 면제 인원은 감소추세인데, 대중문화예술인 등 사회관심계층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면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병역자원국>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병적 별도관리자 장기대기 처분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낮으나, 연예인의 경우 장기대기 처분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 향후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끝>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목 차

1. 정신건강 현역 부적합 판정 年 평균 1만명	29
2. 병무청으로 3D 체형측정기 이전 필요	39
3.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조장자 및 기피자 단속	44
4. 병역자원의 감소 대비 병무정책의 방향	48
5. 병력 동원 훈련의 실시내용과 동원인력	51

<강선영 의원>

1-1. 병무청장님, 한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역자원국>

○ 연 평균 27만여 명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1차 심리검사 인원은 28만여 명) <끝>

* 심리검사 인원 :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자+재병역판정검사자+18세 모집병 수검자

<강선영 의원>

1-2.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이 되지요?

<병역자원국>

○ 네, 맞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1-3.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 부적합 병역
판정을 받는 사람은 한 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역자원국>

- 연 평균 1만여 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병 대상이 아닌
신체등급 4~7급 또는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1-4. 그럼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담당하는 진단자는
총 몇 명입니까?

<병역자원국>

○ 임상심리사 정원은 53명입니다. <끝>

<강선영 의원>

1-5.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심리검사는 4단계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4단계의 심리검사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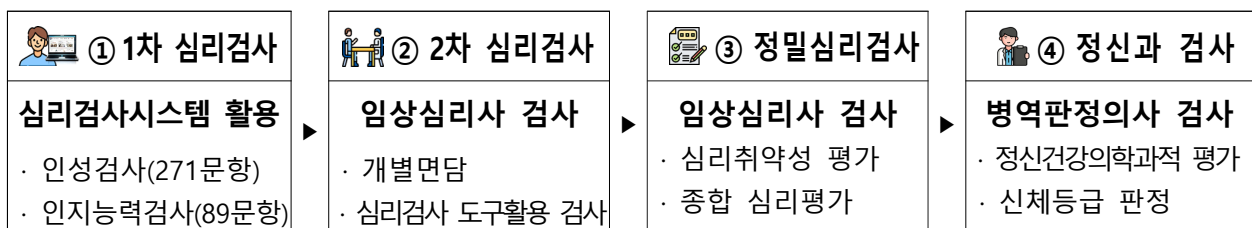
<병역자원국>

- 정신건강 관련 검사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대상자 전원 인성검사(271 문항)와 인지능력검사(89 문항)
 - (2단계) 임상심리사가 개별면담 및 도구 활용 검사
 - * 2차 검사대상 : 1차 검사 이상자, 질병상태문진표(정신과, 심리검사 항목) 체크자
 - (3단계) 정신적 상태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여 검사가 의뢰된 대상에 대해 임상심리사가 면담 및 도구 활용 검사
 - (4단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심리검사결과, 치료기록 등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끝>

-----<참고자료>-----

○ 정신건강 관련 검사 체계('22년, 4단계)

- 종전 1·2차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3단계) + 정밀심리검사 추가(4단계)



<강선영 의원>

1-6. 1차 심리검사는 자가문진표 작성 형태로 진행되니까 진단 인력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고, 개별 면담을 필요로 하는 2차 심리검사 대상자는 연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역자원국>

○ 23년도 기준 약 44,000여 명입니다. <끝>

<강선영 의원>

1-7. 그럼 진단자 53명이 연 평균 약 44,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1인당 약 830명은 면담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3차와 4차 검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피검사자 수 대비 진단자 수의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역자원국>

- 임상심리사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임상심리사 1인당 1일 평균 검사인원은 2차 심리검사 5명, 정밀심리검사 0.6명 수준입니다. <끝>

<강선영 의원>

1-8.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여부는 결국 피검사자가 군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 중에서 훈련소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귀가 조치 되거나, 자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인원이 몇인지 아십니까?

<병역자원국>

- 네, 알고있습니다.
- 귀가 조치되는 인원은 연 평균 5,000여 명이고
현역 부적합 인원은 연 평균 4,000여 명입니다. <끝>

<강선영 의원>

1-9. 육군훈련소나 각군 교육사, 사단 신교대에서 귀가 조치되는 인원은 연 평균 5,000명이고, 자대 배치 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어서 전역하는 인원은 연 평균 4,000명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일병 계급에서 발생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현상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의 절차나 방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병역자원국>

○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

<강선영 의원>

1-10. 가장 큰 문제는 연 평균 22명이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0%가 일병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자대 배치를 받은 인원은 지휘관들에게 엄청난 지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병무청의 심리검사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주시고 방법의 문제라면 제도를 개선해주시고, 법이나 예산의 문제라면 국회에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군에 와야 할 사람은 빠짐없이 와야 하고, 와서는 안되는 사람은 철저히 검사해서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역자원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2-1. 병무청장님, 신체검사시 체형측정을 하십니까?

<병역자원국>

○ 네, 하고 있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2-2.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체형측정은 어떤 방법과 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역자원국>

- 자동신장체중계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끝>

<강선영 의원>

2-3. 결국,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체형측정은 군복을 체촌하는 수준은 아니네요. 그렇죠?

<병역자원국>

○ 네, 치수재기 수준은 아닙니다. <끝>

<강선영 의원>

2-4. 측정시간 과다 소요 등 문제로 각 군에서 3D 체형측정기를 도입하는 데 소요된 예산 13억 1,200만원이 별다른 실효성 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자원국>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끝>

<강선영 의원>

2-5.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3D 체형측정기를 병무청으로 이전하여 신체검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무청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즈별 군복 소요량을 파악하여 입대 전 미리 주문·생산하고 입대 장병에게는 입대와 동시에 군복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청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국방부에 요구하여 문제를 해결해보겠습니다.

<병역자원국>

- 각 군과 마찬가지로 병무청에서 3D 체형측정기를 운영하는 것은 측정시간 과다 소요 등 많은 제한 요소가 있으나,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역병입영대상자의 피복 정보 전달 제안은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3-1. 병무청장님,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단속 강화와 색출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병역자원국>

- 금년도 사이버조사과 출범 후
자동검색 프로그램 도입, 시민감시단 운영 등으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홍보 및 신속한 삭제를 위해 포털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3-2. 과거에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수작업 검색하여 색출했으나, 실시간 자동검색을 통해 신속히 색출하고 단속을 강화하려고 올해 5월에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의 색출이 이루어졌나요?

<병역자원국>

- 금년도 1,333건을 색출하고,
포털사 등에 요청하여 전체 삭제 조치로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확산을 차단하였고,
31건에 대하여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3-3. 자동검색 프로그램 도입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이버의 특성상 급속한
확산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보충이나
신속 사전 차단조치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병역자원국>

- 금년 5월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7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잘 분석하여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3-4. 수사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해외 선진국이나 국내 유명대학에 위탁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진화하는 병역면탈과 기피자들의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역자원국>

- 현재 법무연수원 등에 위탁교육 실시하고, 수사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 향후 위탁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병무청 특사경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피자들의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4-1.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8명 이후 2003년 0.72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시대 향후 병역자원 수급 문제를 잘 검토하고 있는지?

<입영동원국>

- 병역자원감소 시기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4-2.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상비병력
정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입영동원국>

-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4-3.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대책 추진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 병무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입영동원국>

-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 및 병력충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KIDA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

<강선영 의원>

5-1. '24년 현재 금년도 동원훈련 계획의 68.4%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남은 3개월 동안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입영동원국>

- 현재까지 동원훈련소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24년 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강선영 의원>

5-2. 적의 침투나 도발 등 유사시 지역별로 예비군의 동원인력이
매우 불균형적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입영동원국>

- 각 군은 지역별 예비군 규모를 고려하여 동원소요를 제기하고, 병무청은 소요에 맞게 적정 지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 동원방침에 따라 특정 지역 내 예비군이 부족한 경우 인근 지역 예비군을 활용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김 민 석 의원

목 차

1.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184명에 걸쳐 '28년도부터 군의원 수급 비상	57
---	----

<김민석 의원>

1-1.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184명에 그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입영동원국>

○ 향후 군의관 등 충원 부족이 예상됩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 올해 의대생 휴학이 대거 발생하여,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할 예정인데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및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 있나? 국방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나? 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 있나?

<입영동원국>

- 현 상황에서 내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국방부도 '24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 민간 의사 확보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3. 국방부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계획이 내년 입대 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의 가능성 있는지? 만약 계획이 늦어진다면 입영통지도 미뤄질 가능성 있는지?

<입영동원국>

-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입영계획을 수립(입영일 40일 전)하고, 병무청은 그 계획에 따라 입영통지(입영일 7일 전)할 계획입니다. <끝>

<김민석 의원>

1-4. 수련기관을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수료연차, 나이 등 고려할 기준이 많을 것, 입영순서에 대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

<입영동원국>

- 수련기관 퇴직자의 내년도 입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5. 이들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의무장교로 입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예정된 의무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해에 또다시
군의원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입영동원국>

- 현재 국방부에서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민간 의사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6. 향후 우려되는 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무청에서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 및 조속한 입영계획 마련에 노력 기울여 주기 당부

<입영동원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김 병 주 의원

목 차

1. 강서구 김○○ 구의원 병역문제	67
2. 스티브 유 병역기피	72
3. 생화학분석기 교체에 따른 처분오류	76
4. 청력장비 예산낭비	84
5. 병역자원감소 대비해야	89
6. 병역면탈 범죄단속 강화해야	90
7. 전시동원체계 개선해야	98
8. 입영판정검사 마약류 검사	108
9. 병역특례감소 전문요원만 반대로	112

<김병주 의원>

1-1. 사회복지요원이 겸직을 하면 정상적인 활동입니까?
병역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사회복무국>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생계유지 필요 등에 한해 겸직 허가받은 경우, 병역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 대법원은 금년 9월에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각했죠?

<사회복무국>

○ 네, 그렇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3.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꾼 강서구 김민석
구의원은 무소속으로 구의원 활동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구의원으로서 겸직 활동은
불가합니다.
-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이 확인되어 겸직 위반
사유로 두 차례 경고 및 복무연장(10일) 처분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4. 구의회 의장은 직권휴직 명령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휴직명령을 취소 결정하고 구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죠?

<사회복무국>

○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의원>

1-5. 1-6. 위반이라면 지속적인 경고처분을 해야 하며
경고처분 4회시 병역법 제89조의 3항제2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병무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김민석 구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도 하면서 봉급을 받고, 공익근무에 대한 봉급도
받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역의무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무국>

-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불허가 취소소송에서는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또 다른 판결에서 구의원에 대한 직권휴직 명령에 대해서
휴직명령 임용권자의 부재, 참정권 제한의 최소화 및 입법
흡결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을 강제할 수 없으나 해당
의무자가 겸직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경고
처분 및 복무 연장 등 조치를 할 것입니다.
- 한편,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사항은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김병주 의원>

2-1. 22년 전 병역기피 논란을 빚었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다시 무산됐는데, LA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죠?

<입영동원국>

○ 네, 그렇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2-2. 스티브유의 2024년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LA총영사관은 6월 18일 자로 거부처분 통보했죠? 맞나요?

<입영동원국>

○ 네, 그렇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2-3. 스티브유 측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하고 이후에도 LA총영사관 비자발급을 거부했음.
유승준은 2차 소송을 제기해 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죠?

<입영동원국>

○ 네, 그렇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2-4. 스티브유 측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병무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동원국>

- 스티브유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무부와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티브유의 경우 병역을 면탈한 기피자이며,
- 또한,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재 거부하면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3-1. 생화학분석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병역자원국>

-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수검자의 간기능, 신장기능 등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3-2. 2022년 7월말부터 8월까지 서울지방병무청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청의 생화학분석기를 교체했죠?

<병역자원국>

-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을 제외한 지방청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1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3-3. 문제는 두 회사의 생화학분석기로 동일한 사람(검체)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을 때 결과값이(GOP, GTP)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험운용을 통해 오차여부를 확인하고 보정했어야 함에도 병무청은 그냥 사용했죠?

<병역자원국>

- (장비 도입) 당시 교체된 장비 자체의 정확도만 테스트하여 운용하였으며,
- (장비 운영) 운용 과정에서 기존장비와 교체장비의 결과값 차이를 확인하고 보정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3-4. 문제는 7월말부터 8월사이에 장비가 도입된 후 현역으로
처분될 사람이 사회복지무요원 소집대상(4급)이나 재신체
검사대상(7급) 처분되었죠?

<병역자원국>

- 현역대상을 사회복지무요원 소집대상(4급)으로
판정한 사례는 없었으며,
7급으로 판정한 경우는 일부 있었으나
- 7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장비 보정 이후에
정상적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3-5. 2022년 11월 대전충남병무청에서 표본조사결과를 병무청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자원국>

○ 별도 첨부 <끝>

<김병주 의원>

3-6. 제조사에 따른 검사결과 표본 차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역자원국>

- (장비 도입)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간 오차를 확인하여 보정하고 있으며,
- (장비 운영) 매년 주기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장비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3-7. 문제는 2022년 8월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상당수의 인원이 부정확한 검사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역자원국>

- 신규 도입 장비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또는 2급, 7급 대상자로 판정하였으나
- 현역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3-8. 병역의무의 생명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병역자원국>

- '22년 당시 장비간 오차를 확인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으며,
- 매년 주기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장비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 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장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4-1. 2020년 7월경 병역판정검사(청력검사)를 위해 뇌간유발
검사 장비를 도입하셨죠?

<병역자원국>

○ 네. 맞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4-2. 10개 지방청에 10대를 도입하고 당시 장비의 1개당 단가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5천5백만 원 소요되었죠?

<병역자원국>

- '20년도는 12개 검사반에 각 1대 총 12대 도입하였고,
1대당 약 5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43. 위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장비를 운용할 인력도 없이 먼지로 뒤덮힌채 6년째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병역자원국>

- 청각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임상병리사*가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 청각사 연수과정(대한이비인후과학회 주관) 이수자 19명
- 의원님 말씀처럼
활용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4-4. 현재는 어떻게 청력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역자원국>

- 이비인후과 전담의사는 청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상병리사에게 청력검사를 의뢰하고,
- 임상병리사는 당일 또는 수검자가 가능한 일자에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4-5. 관련부서 직원들은 왜 도입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내용연수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은 위 내용을 내부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자원국>

- 청력검사 장비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의사 및 장비사용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신규장비 도입 시에도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5. 병역자원관련 1차 인구격감기에 이은 2차 인구 격감기가 오는 시점이 언제죠?

<입영동원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35년부터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김병주 위원>

6-1. 뇌전증,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병역자원국>

- 네, 그렇습니다.
- 뇌전증, 정신질환 위장 등 42종의 병역면탈 신종수법이 적발될 만큼 병역면탈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지능화되는 추세여서 병무청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위원>

6-2. '23년 3월에 뇌전증 위장 브로커 2명과 병역면탈자 108명, 공범 20명 등 130명이 검찰에 기소되었죠?

<병역자원국>

- 네, 그렇습니다.
- 지난해 3월 병무청·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 2명, 병역면탈자 108명, 공범 20명 등 총 130명을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위원>

6-3.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처벌근거 마련 및 특사경의 처벌을 위해 병역법 및 사법경찰직무집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병역자원국>

-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병무청 특사경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병역기피자(신체검사, 징·소집)에 대해서도 올해 7월 17일부터 병무청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 「병역법」 제81조의3 신설 : 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 「병역법」 제87조의2 신설 : 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기 준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숙임수(제86조), 대리수검(제87조제1항)



추가 (확대)
①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의 게시·유통자(제87조의2) ② 기피·감면 목적 도망·행불자(제86조) ③ 신체검사 및 장·소집 등 기피자(제87조3항, 제88조1항)

<김병주 위원>

6-4. 조직 효율화를 위해 특사경 사이버수사인력 강화 등 특사경 인력 증원을 실시하였는데 몇 명이나 하였죠?

<병역자원국>

-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본청 사이버조사과 및 경인청 병역조사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수사인력 등 특사경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 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위원>

6-5. 특사경 인력을 증원했지만 전문수사기법을 배운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갑자기 증원해서 그런 겁니까?
뭐 땀에 그런 겁니까?

<병역자원국>

-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병무청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특사경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위원>

6-6. 특사경 요원을 정예화해야 합니다. 28명의 1년 미만 채용자에 대해 훈련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병역자원국>

- 네, 알겠습니다.
-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법무연수원 등 수사 전문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특사경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김병주 위원>

6-7.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기법 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하며 AI기반 병역면탈 경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AI기반 병역면탈 경보체계가 무엇입니까?

<병역자원국>

- AI기반 병역면탈 경보체계는 검사 단계별, 질병별, 병원별 등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 병역면탈 고위험군과 우려자를 사전에 포착하여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강화와 기획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분석 체계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6-8. 병역면탈 범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병역면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보श्य요?

<병역자원국>

- 병역면탈 범죄는 공정과 정의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특사경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1. 병무청의 핵심 임무는?

<입영동원국>

-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7-2. 전시동원체제로 전환 시 병무청의 역할은?

<입영동원국>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소집하여 적기 충원함으로써 군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끝>

-----<참고자료>-----

- 병무청 주요 임무
 - 평시 : 동원지정 및 소집통지서 교부, 전시계획 보완·점검
 - 전시 : 병력동원소집 집행(병력수송, 급식지원, 인도인접 등)

<김병주 의원>

7-3. 평시 동원지정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지?

<입영동원국>

- 우편 및 정보통신망(이메일, 상용앱)을 활용하여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확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4. 행안부 재난문자송부체계는 비상상황전파 및 통지서
확인 안내 시 이용하도록 충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입영동원국>

○ 네. 국방부 및 병무청 충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5. 시범적으로 한번 발송해 보았는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입영동원국>

- 재난문자는 목적에 맞게 유사시에만 발송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6. 빵, 전투식량, 에너지바, 먹는샘물 등은 동원예비군 이동
시나 숙영 시 필수물품인지?

<입영동원국>

○ 네, 그렇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7. 집단 수송 시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방 조치 매뉴얼이 있는지?

<입영동원국>

- 급식 제공을 즉시 중단, 인근 의료지원반을 통해 의약품 지급 및 의료시설 이송 등 조치를 실시하며,
- 관련 매뉴얼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에 포함하여 구비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8. 전시상황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등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병력을 충원하는지?

<입영동원국>

- 각종 우발사태 대비 전시계획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 우발상황 발생으로 추가 동원소요 발생 시에는 긴급동원 절차에 따라 병력을 충원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7-9.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비전력의 역할 어떻게 보았는지?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지?

<입영동원국>

○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7-10. 전시체제로 전환 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지 않는지?
이번 훈련 결과를 보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아
보이는데, 개선하겠는지?

<입영동원국>

- 이번 을지연습 결과에서 나타난 개선, 보완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8-1. 2024년 7월 10일부로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6종) 검사를 실시하죠?

<병역자원국>

○ 네, 그렇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8-2. 실시한 이후 마약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병역자원국>

○ 현재, 양성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끝>

* 10.8. 입영판정검사 마약류 검사 → 10.10. 최종 양성(필로폰)

<김병주 의원>

8-3. 지방청 검사장별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마약류
검사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있나요?

<병역자원국>

○ 검사반별 1명으로 총 10명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8-4. 군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입영판정
검사자 등 군 마약류 유입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자원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9-1. 국방부의 병역특례 대한 입장은 감소인지, 증가인지?

국방부는 22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분야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맞는지? 작년 국감에도 병역특례제도 전반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 2026년까지 감소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맞는지?

<사회복무국>

- 네, 그렇습니다.
- '19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 '26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대체복무 인력의 배정 계획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9-2. 최초 계획대비 100명이 증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반도체를 강조하니까 증원하였는데 반도체요원은 몇 명이나 추가 배정했는지? 올해 8월 기준 미편입인원이 1,300명이 넘고, 23년도에도 759명이 넘는데 추가 증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회복무국>

- 전문연구요원 전체 총원(2,300명)은 변함이 없고,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100명 줄이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100명 늘려 반도체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 향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추이를 보며, 장기적으로 배정 인원 조정에 대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박 범 계 위원

목 차

1-1.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종합 설계를 한다고 하였는데, 종합 설계에 따라 자격증 취득 등 지원이 이루어진 현황	119
1-2. 실제로 취업지원까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	120
2. 특사경 병역면탈 방지 인적자원 한계	121
3. 의대생 현역병 지원 급증에 따른 대책	122

<박범계 의원>

1-1. 진로와 연계한 청년맞춤 병역설계 추진 관련하여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종합 설계를 한다고 하였는데, 종합 설계에 따라 자격증 취득 등 지원이 이루어진 현황은?

<입영동원국>

-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진로상담을 통해 흥미·관심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전역 후 군 경력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생애 설계적 관점에서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에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 병무청에서도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국방전직교육원 기술직무 체험과정 신설 협조,
 - 민간 취업 전문기관의 인적성검사 무료 이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박범계 의원>

1-2. 실제로 취업지원까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와 전은?

<입영동원국>

- 기술·자격이 없는 고졸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고용노동부 등의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관련분야 군 복무 후 이를 연계하여 취업한 사례, 직업계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고 전역 후 바로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취업과 연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는('23년도 기준 1,800여 명) 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 등을 통해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

<박범계 위원>

2. 특사경(60명) 병역면탈 방지 인적자원 한계?

<병역자원국>

- 지난해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기피자 단속 등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특사경 인력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병역면탈 수사를 위한 인력증원이며, 기피자 단속 등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 병무청은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특사경 인력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특사경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박범계 의원>

3. 의대생 현역병 지원 급증에 따른 군의관이나 공보의
모집에 대한 대책

<임영동원국><사회복무국>

- 현재 국방부에서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민간 의사 확보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안 규 백 의원

목 차

1. 복수국적 취득서류 위조 의혹 관련 제도 개선	127
-----------------------------------	-----

<안규백 의원>

1. 최근 재벌가 사위 복수국적 취득 위조 의혹을 포함, 병역 면탈 의혹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 유지, 의혹 해소 전까지 입국허가 및 비자발급 제한 및 입국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의 의무를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입영동원국>

-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목 차

1. 병역기피자(국외여행 허가 의무반자) 관리와 형평성을 갖춘 병무행정을 위해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해야 133
2. 사회복지요원 소집 적체 해소와 함께 현역 자원 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139

<허영 의원>

1-1. 현재 ‘병역기피자’ 전체에 대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인신상을 공개하고 있는지?

<입영동원국>

○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끝>

<허영 의원>

1-2. 국외여행허가 의무 병역기피가 왜 많이 발생하고,
그들 중 극소수만이 병역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입영동원국>

- 병역의무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출국 전·후
허가기간 및 미귀국자 제재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 그럼에도 미귀국 시에는 형사고발, 여권 반납명령 요청,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

<허영 의원>

1-3. 국적포기, 시민권 취득, 불법체류 등 위반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입영동원국>

- 국적상실·이탈자 현황,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현황 등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끝>

<허영 의원>

1-4. 행정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병역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들은 악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입영동원국>

○ 네,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끝>

<허영 의원>

1-5. 병역기피 명단공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입영동원국>

-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으며,
- 여권법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수단을 통해 제재하고 있습니다. <끝>

<허영 의원>

1-6.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방지대책을 마련
해주기 바람.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도 함께 하겠음.

<입영동원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허영 의원>

2-1. 병역법 개정 시행으로 '21년 10월부터 사회복지요원 대상자도 현역복무 신청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약 2천여 명 가까운 보충역 자원이 현역으로 입영하고 있고, '23년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장기간 소집 대기 중인 사회복지요원 대상자들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무국>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21년 사회복지요원 대상자 중 현역복무 희망제도를 신설, 현재 7,657명이 선택하였으며, 이 중 5,747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역복무 희망자 중 1,178명이 상근예비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 4급 판정자 중 현역복무 신청현황('24. 8. 31. 현재, 단위 : 명)

계	'21년	'22년	'23년	'24. 8월
7,657	1,199	2,358	2,604	1,496

*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신청 현황 : 1,178명

<허영 의원>

2-2.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자원 수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주시고, 국회도 적극
나서겠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입영동원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